



총체적 정치공작 경제 위기 고통전가 철도 민영화 추진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까서 단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여겼던 듯하다.

결국 몸통은 '이명박근혜'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방송이 총동원된 반동적 정치 공작이 지금 사태의 본질이다.

이 총체적 정치 공작은 2008년 촛불운동과 세계경제 위기 이후 우파 지배자들의 위기의식과 공포감에서 비롯했다. 우파 지배자들은 노동자·민중 운동을 단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우파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명박은 촛불운동 경찰 진압을 총지휘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을 이듬해 초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세훈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는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작은 단순한 '댓글 달기와 여론 조작'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저들은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들을 '총동원'했다.

이런 공작의 결과, 이명박 집권 후 국가보안법 탄압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첫해보다 2.4배나 입건이 늘었다. 2009년에 경찰은 쌍용차 파업을 살인 진압하고 있을 때, 국정원에선 "불법집회나 불법노조 ...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었다.

"[전교조의]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말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것도 원세훈의 '지시 말씀'이었다.

원세훈은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 나흘 전에 "여론이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한미FTA에 관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해라"고 지시했다. '반값등록금 차단'도 지시했다.

총선 직후에는 조중동이 '통진당 주사파 간첩 장악설' 소설을 쓰며 진격의 북을 울렸고 검찰은 당원 서버를 탈취해 갔다. 이

때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 ...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는 원세훈의 지시가 하달되고 있었다.

"절라디언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같은 '일베충'급 댓글의 배후에도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 있었을 것이다.

"귀태"

그리고 이런 공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한 달 새에만 'MBC 2580' 불법 사태, YTN 보도국 회의 사찰, 시국선언 학생회 사찰 등이 밝혀졌다.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선 '표창원 제압'이나 '촛불 차단' 문건이 하달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뭔가 뉘우치고 태도를 바꿨다고 볼 근거가 조금치도 없다. 박근혜는 대화록 공개 때는 "NIL은 피로 지킨 곳"이라며 물타기에 앞장섰고, 지금은 도리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기능'까지 국정원에 맡기려 한다.

게다가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촛불을

든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우파는 '귀태' 발언을 핑계로 또 역겨운 물타기와 우파 결집에 나서고 있다. 자기들이 그동안 한 막말과 난동은 까맣게 잊은 듯이 말이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낮 두껍고 뻔뻔하고 야비하기로 따라갈 사람이 없다.

'사회적 흥기' 수준의 언론·방송이 이런 정치 공작의 악질적 공범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안철수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며 헛다리만 짚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가 무력해질수록 거리에서 싸우자는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촛불은 더 번지고 있고, 진주의료원, 철도 민영화 등에 맞선 노동자 저항과 만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와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전교조, 현대차노조 등 노동계도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은 쟁점을 결합시키며 '이명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총체적 반우파 투쟁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요구를 확대해서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촛불이 커지고 시국선언이 번지는 것은 ‘국가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세 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취임 이래 켜켜이 쌓여 온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선거용 가면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조하고, 지금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작 3백50원 올랐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짓밟은 것이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운운하며 비정규직 확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을 13~14퍼센트가량 인상하는 개악도 추진하려 한다. 전경련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엑소더스[대탈출]” 운운하며 노골적 협박을 일삼자 박근혜는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박근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짓밟고 전국의 노동자 농성장들을 연달아 폭력 철거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도 계속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의 이런 패악질은 경제 위기와 관련이 깊다. 더욱이 최근, ‘버냉키 쇼크’에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커져 가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



결국 표적은 하나다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함께 타올라야 한다. 7월 6일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에 참가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나려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도 자라나고 있다. 최근 건설 노동자들은 파업 하루 만에 의미있는 승리를 거뒀다. 철도 노동자들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촛불은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몸통인 박근혜를 정면 겨냥해야 한다. 총체적 정치 공작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민영화 반대,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확대할 때 진정으로 박근혜를 위협하는 더 크고 강력한 운동이 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 유린이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인지 더 분명히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시국선언에

서 “민주주의 없이는 노동기본권도 생존권도 없다” 하며 이것을 잘 지적했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불만에서 터져 나온 촛불 운동도 입시 교육, 민영화, 언론 장악에 대한 반대로 의제를 확장하며 더 크고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한 바 있다.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1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1조 원의 예산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가장 먼저 처리한 안건이 바로 강력한 비밀경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워진 중앙정보부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 조작으로 돈을 모으고,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MBC 등을 강탈해 집권당이 될 공화당을 만들었다.

1974년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며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중앙정보부는 온갖 고문과 조작도 모자라, 고문 흔적

을 감추려고 사형당한 시신마저 빼앗아 강제 화장시켰다.

압권은 마지막 중앙정보부장 전두환이 박정희를 잇는 독재 정권을 세운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활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모질게 고문했고 프락치 공작을 펼쳤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창수 열사는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다가 결국 의문사 했다. 당시 안기부는 시신을 훔치고, ‘자살’로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안기부는 더욱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날뛰었다. 김영삼이 1996년 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 정부’ 아래서도 국정원은 더러운 역사를 계속 썼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을 계속했다. 1999년 상반기 동안만 상시 감청 대상자가 1만 명이 넘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은 송두율 교수를 ‘간첩’으로 만들고, ‘일심회’ 사건을 조작했다.

‘민주 정부’하에서도 국정원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에서 소수 지배자들이 착취·억압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면 억압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국정원은 ‘정권 안보’를 넘어 ‘체제 안보’를 위한 도구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에 이런 비밀 경찰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셀프 개혁’ 운운하며 국정원을 애지중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항운동의 감시와 탄압을 본업으로 하는 국정원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귀태’인 것이다.

www.marxism.or.kr

13년째 열리는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은

MARXISM

7월 19일(금) - 22일(월)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노동자연대다함께

지정학적 위기: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계급투쟁 전망 등
60개 이상의 주제
존 롤러뉴, 박노자, 김수행, 우석균 등
60여 명의 국내외 연사

관련 기사들이 실린

레프트21

108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